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42호 | 2024년 12월 10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예외조항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논의하라

남 국 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요 약 》

■ 현황

-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개발(R&D)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발의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확대를 시도함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52시간 근무제가 안정화되고 있음

■ 주 52시간 예외의 문제점

- 주 52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로가능하여 장시간 노동에 노출
- 반도체 기술개발(R&D) 근로자에게만 근로기준법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산업의 기술인력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제기
-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였지만, 이후 반도체 수출물량은 매년 14.6%씩 성장하였고, 반도체 기술개발(R&D) 수준도 지속적으로 발전함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로 규정
- 반도체 산업에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장시간 근로의 문화가 확산되면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반도체 기술인력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임

■ 정책제언

- 탄력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사업장 근로시간의 연장방안 마련
-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
- 근로시간 연장보다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확대와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 키워드: 근로시간, 반도체특별법, 근로기준법, 연구개발, 주 52시간제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현황

-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개발(R&D)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발의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확대를 시도함
 -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조항을 넣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반도체 특별법(이철규 외 20인, 24.11.11) 발의: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자의 경우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52시간 근무제가 안정화되고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는 '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됨
 - 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시행하였으나, 22년 12월말에 일몰됨
 -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대하려 하지만, 산업별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초과실근로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근로시간 연장의 실효성에 의문
 - 월 단위 전체 초과실근로시간은 '13년 16.5시간 → '23년 11.9시간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산업별로 제조업이 32.0시간에서 21.7시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함
 - 초과실근로시간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에서 각각 4.3시간, 4.0시간 감소하였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6.9시간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초과 근로시간이 낮은 수준임

<표 1> 산업별 월 단위 소정실근로시간 및 초과실근로시간(단위: 시간)

기업규모	2013		2023	
	소정실근로시간	초과실근로시간	소정실근로시간	초과실근로시간
제조업	156.9	32.0	161.3	21.7
건설업	159.0	9.4	167.4	11.6
도·소매업	162.4	10.5	164.4	6.2
운수·창고업	161.9	17.2	162.3	13.2
숙박·음식점업	182.8	15.4	172.1	12.8
정보통신업	152.8	5.6	164.4	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4.5	4.8	163.9	6.9
전체	160.4	16.5	163.8	11.9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주: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실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주 52시간 예외의 문제점

- 주 52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로가능하여 장시간 노동에 노출
 -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하면, 1주 6일 근무 시 주 69시간(29시간 초과근무), 1주 7일 근무 시 최대 80.5시간(40.5시간 초과근무)까지 가능
 - 하루 24시간 중 연속휴식기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 근무가능, 6일 근무시 11.5시간×6일=69시간, 7일 근무 시 11.5시간×7일=80.5시간(주 최대근무시간)
 -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
- 반도체 기술개발(R&D) 근로자에게만 근로기준법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산업의 기술인력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제기
 -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109,014명으로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9.7%에 불과하며, 다른 산업의 기술인력들도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하여 장시간 근로문화의 확산 우려
 - 산업기술인력: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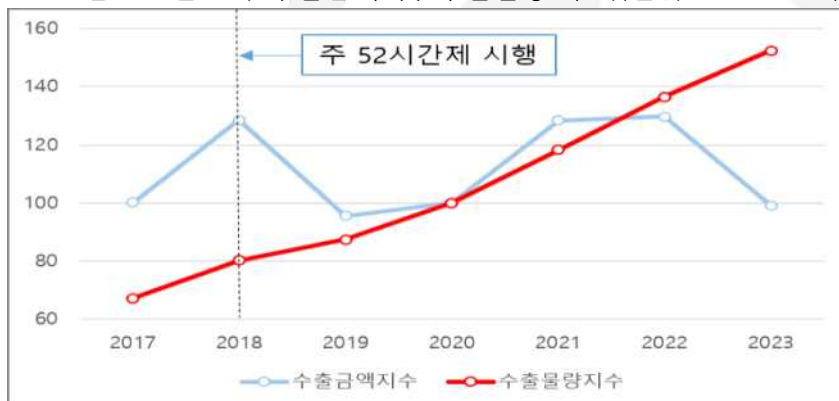
<표 2>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분포(단위: 명, %)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계
152,346	48,812	109,014	36,999	33,231	121,897	205,206	58,043	64,475	123,505	150,122	24,839	1,128,489
13.5	4.3	9.7	3.3	2.9	10.8	18.2	5.1	5.7	10.9	13.3	2.2	100

자료: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2023), 산업통상자원부

-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였지만, 이후 반도체 수출물량은 매년 14.6%씩 성장하였고, 반도체 기술개발(R&D) 수준도 지속적으로 발전함

<그림 1> 반도체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추이(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기존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7년 67.1에서 2023년 152.5로 127.4% 증가하여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00.1에서 2023년 98.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금액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영향에 따라 수출단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지 않았음
-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제조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있고, 반도체 기술개발(R&D)을 위해서는 근로시장 연장보다는 R&D 투자 확대, 반도체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의 산업기술 정책이 필요함
- 삼성 반도체 적층제조 공정기술: '16년(64단) → '18년(92단) → '19년(128단) → '21년(176단) → '22년(236단) → '24년(286단)
- SK 하이닉스 반도체 적층제조 공정기술: '17년(72단) → '19년(128단) → '22년(176단) → '23년(238단) → '25년(321단)
- * 적층제조는 반도체를 위로 쌓는 것으로 용량과 속도 면에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방법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로 규정

-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과 불규칙한 노동으로 근로자 건강 위험 증대
 - 의학계는 단기적으로 과로하면 생체리듬 불균형,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 정신적인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으로 정함
- 직장인 10명 중 8명(77.9%)가 '(최대)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
 - 1주일에 최대 근로시간 상한은 '48시간' 적절 48.3%, '주 52시간' 29.6% 순으로 응답(시민단체 직장갑질119, 2023)
- 한국노총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가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의 폐기 요구
 - 반도체 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 조건의 최저선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함
 -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로도 노동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1주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80시간, 재량근로시간제는 1일·1주간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전달함

○ 반도체 산업에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장시간 근로의 문화가 확산되면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반도체 기술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임

- 의학계와 이공계의 연봉격차로 이공계 인력이 의학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 반도체 산업의 장시간 근로문화의 확산은 젊은 세대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장시간 근로문화의 확산보다는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21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이 많음(독일 1,349시간, 프랑스 1,490시간 불과)

3. 정책제언

○ 탄력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사업장 근로시간의 연장방안 마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최대 1주 64시간 근로 가능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성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 등에서 활용
 -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무제의 유형에는 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탄력근무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로 구분함

<표 3> 탄력근무 유형별 내용

단위기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실시요건	1. 취업규칙(10인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특정주 48시간 초과 불가(연장근로 주 12시간 제외)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불가(연장근로 주 12시간 제외)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불가(연장근로 주 12시간 제외)
1주 최대근무시간	최대 60시간(48시간+12시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

-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R&D 분야는 6개월까지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하여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
 -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무 유연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 결정
 -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 분야의 전문직 연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

○ 근로시간 연장보다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확대와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

- 대학 및 연구소의 원천기술개발비(R&D), 인력양성 → 10년간 10조원 보조금 지급 확대
 - 반도체 인력은 '21년 11만명이 부족하여 인력양성 필요하며, 향후에도 부족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국내 반도체 인력부족 현황

구분	2021년	2031년(전망)	현재 연간 총원인원
학사	8만 1000명	13만 5000명	1928명
석·박사	2만 9000명	5만 2000명	431명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10조원)
 - R&D 연구개발비, 제조 시설·설비 구축비 → 10년간 10조원 보조금 지급
- 반도체 해외기업 국내유치(5조원)
 - 반도체 기술이 취약한 소재·장비 및 비메모리 분야의 해외기업에 제조 시설 구축비 → 10년간 5조원 보조금 지급